

[종합·해설]

J프로젝트 간척지 양여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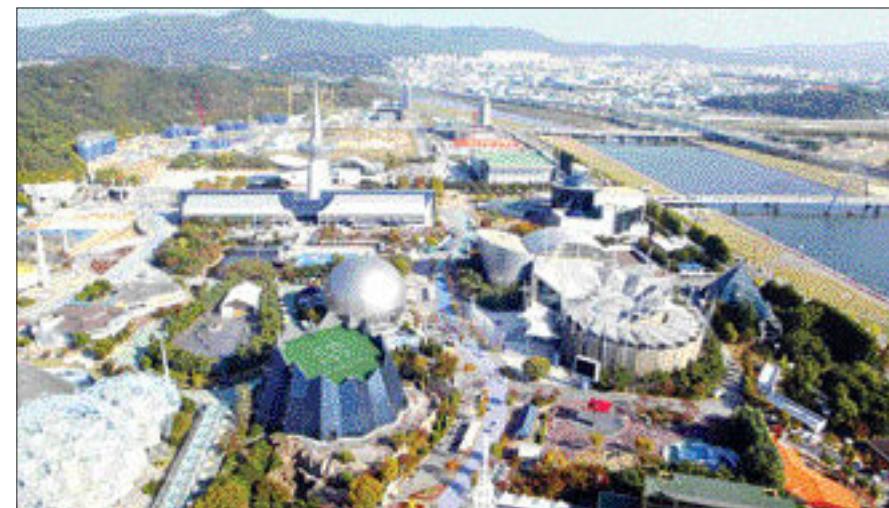
부산시민공원·대전엑스포 지원 사례

부산 정부가 미군기지 매입 70% 보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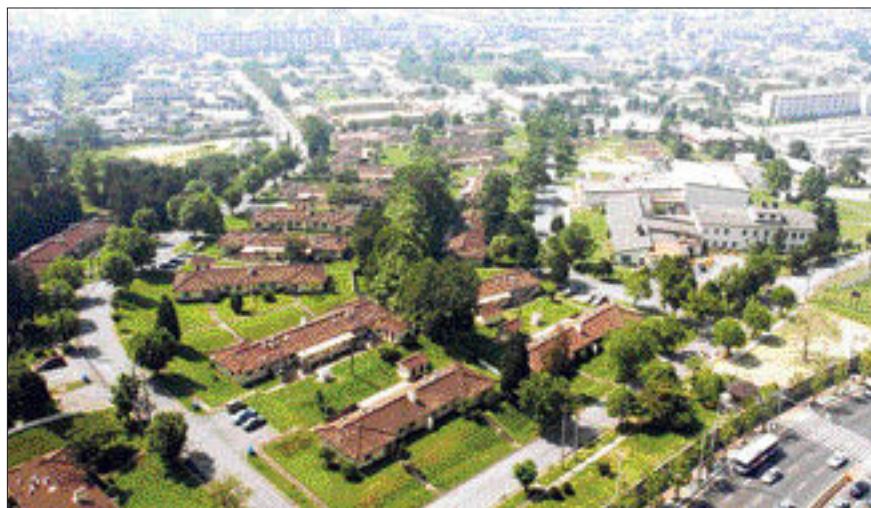
대전은 '대통령 결재' 통해 땅 문제 해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남권 개발 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부산·대전 등에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사례가 확인됐다. 이의 원용 문제는 새로운 관심으로 떠올랐다. 서남권 개발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되고, 이미 다른 사업에서 정책적 차원의 보조가 이뤄진 만큼 해남·영암 간척지 무상 양도·양수도 이같은 논의에 따라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지 매입비 대폭 지원=부산시 진구 미군부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 폐쇄 후 이전부지 16만여 평에 들어서는 부산시민공원 조성을 위한 인수 부지 예상 가격은 3천억여원. 부산시가 추정한 미군 부대 부지 매입 감정가격은 3천억원으로 예상되지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전체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부가 용지 제공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대전 엑스포과학공원(왼쪽)과 부산 시민공원 예정 부지인 주한미군 '하야리아' 부대의 전경.



韓대표 "대세 쫓는 사람勢 떨어지면 끝난다"

민주당 워크숍 신당 참여-독자 생존 격론

민주당이 6일 정계개편 노선을 놓고 난 상토론을 벌였다.

이날 오후 국민은행 천안연수원에서 열린 국회의원, 중앙위원,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는 '해쳐모여식 신당창당이나, 독자 생존이냐'를 놓고 지도부 간 미묘한 인식의 차를 드러냈다.

한화갑 대표는 "노무현 정권의 실정에서 자유로운 정당은 민주당 뿐"이라며 민주당 중심론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것이고, 대세를 쫓는 사람은 세가 떨어지면 끝난다"며 "배

가 고파도 우리가 먹을 음식이 아니면 먹지 말아야 한다"며 당내 친(親) 고건파를 겨냥한 경고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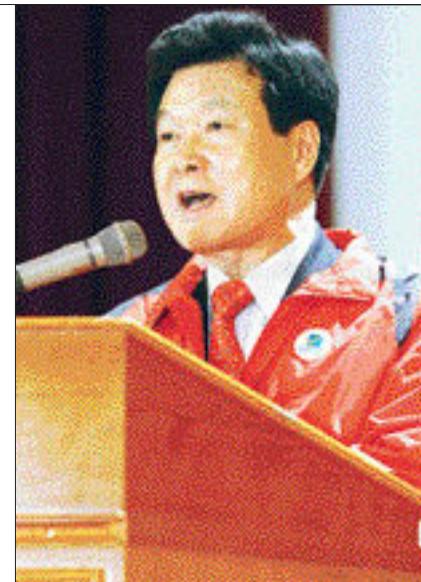
장상 대표도 "민주당의 자금심과 일체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며

"50년 전통, 뿌리 깊은 민주 세력이 어떻게

역사적인 힘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한 대표를 거칠었다.

반면 김효석 원내대표와 최인기 정책위 의장은 중도개혁 실용주의에 바탕한 '해쳐모여식 신당창당'론에 무게를 두면서 당내 일각의 독자생존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6일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 중앙위원 및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한화갑 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내분 숨고르기

김근태의장 "전당대회 통해 당 진로 결정"

통합신당파-친노파 물밀 세대결은 치열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지난 5일 심야 회동을 통해 통합신당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정기국회 뒤로 미루고 전당대회를 반드시 치르겠다고 밝혀 결별 전진까지 치달았던 친노 그룹과의 갈등은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김근태 의장이 친노 그룹에 대해 국정 실패를 인정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을 촉구하며 통합신당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데 맞서 친노 그룹은 비대위 해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당 내 통합신당파와 친노 그룹이 본격적인 세 대결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최종적인 당의 진로는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으로 정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개최를 통해 당의 진로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초반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표 대결에 대비한 우리당내 신당파와 친노그룹의 세 결집 움직임이 가시화되는 것은 물론 전대의 성격과 의제, 비대위 해체 여부 등을 놓고 양측간 논쟁도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대위와 통합신당파 의원들은 전당대회를 우리당의 발전적 해체와 통합신당 추진 방침을 확인하는 절차로 생각하는데 반해 친노진영은 전대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고 그 이후 정계개편 작업을 현 여당 주도로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일단 당 지도부와 통합신당파는 기간당

원제가 폐지되고 권역별 어촌수령을 통해 당내에 '해쳐모여식 정계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고해 전당대회에서 신당 창당이 관찰될 가능성이 크다는 계산 아래 예산국회가 끝나는 대로 설문조사를 통해 전대 의제와 일정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비대위가 설문조사 일정을 연기하고 전대 개최 방침을 서둘러 공개하고 나선 것 자체가 친노진영이 준비중인 전국당원대회 등 세 규합의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이에 맞서 친노진영은 오는 10일 예정된 전국당원대회까지 전·현직 선출자 당직자 500명의 연서명을 받아 당원대책위를 구성키로 하는 한편 전대에 앞서 비대위를 해체할 것을 요구하며 현 지도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친노진영은 의원들의 세력분포만을 놓고 보면 통합신당파가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당원 구조를 보면 오히려 친노성향 당원들의 세력이 더 강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 당비대납 사건이 터진 뒤 기간당원이 8만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이 기간에 친노 성향 기간당원의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전대 의제와 성격을 놓고 통합신당파와 친노그룹 간의 이견 차가 크고 대의원 확보 경쟁 과정에서 양측간 감정싸움이 확산될 가능성도 커 전대를 개최하지 못하고 그 이전에 결별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당 지도부와 통합신당파는 기간당

광주지역 친노그룹 '행동 개시'

비상결의대회...비대위 해산 등 요구

통합신당 추진을 놓고 열린우리당의 분열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광주 지역 친노 그룹이 먼저 공격의 깃발을 들었다.

개혁당 출신과 노사모 회원, 신진보연대 회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광주지역 친노그룹이 7일 오후 열린 우리당 광주시당 대회의실에서 '우리당 정상화를 위한 광주당원 비상결의대회'를 갖기로 한 것이다.

자신들을 '우리당 정상화를 위한 광주당원 비상결의대회 추진위'라고 밝힌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통합신당파가 주축을

이룬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의 해산과 중앙위원회의 권한 회복을 주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기간당원제 폐지 등을 끌자로 한 당헌 개정에 대해 '월권행위'와 '당원에 대한 폭거'로 규정하고 전당대회를 개최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남지역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상당수 당원들이 통합신당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요구가 지역 당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와 관련 광주시당은 이날 결의대회와 시당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